

##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이 원 진

(서울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주제어 : 노인, 소득불평등, 집단별 분해, 소득원천별 분해

###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노인의 전형적인 생애과정은 농어업 중심의 노동경력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고 노년기에 성인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받으며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안정적인 은퇴를 경험한 노인과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노인,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과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 등 노인 집단의 이질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삶의 양식이 다양화되면서 노인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한국의 18~65세 인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00으로 OECD 평균인 0.311보다 작지만, 노인 인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405로 OECD 평균 0.299보다 훨씬 크다(OECD, 2010). 게다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0년 11.0%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고려하면(통계청, 2011),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sup>1)</sup>

노인 소득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 노인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본적으로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비노인에 비해 노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임병인·전승훈, 2005),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강성호·임병인, 2009). 최근에는 몇몇 연구들이 노인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해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바 있다(김경아, 2008; 손병돈, 2009; 임병인·강성호, 2011). 대표적으로 손병돈(2009)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가 2000년대 중반에 다시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를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이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지만 그 영향은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원천별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성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의 요인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된 2008년을 포함한 최근까지의 추이를 완전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98~2008년의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집단별 분해와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해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공적·사적이전의 재분배 효과에 주목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노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함으로써 노인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 부양행태의 변화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부양행태의 변화는 노인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노인가구주 가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김경아, 2008; 손병돈, 2009; 임병인·강성호, 2011)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에 속한 노인이 증가하는 변화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노인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변화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소득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1)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체 인구 집단의 소득불평등은 노인과 비노인 집단 각각의 소득불평등, 노인과 비노인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 노인과 비노인 집단 간의 소득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양상을 파악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 재분배 기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국민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박경숙, 2001; 최현수, 2002; 이용재, 2008; 배준호, 2011), 이러한 주장이 실증적으로 타당한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공적연금의 성숙 과정에서 사회보험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회보험의 확대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향후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가구구성 특성, 공적·사적이전 등 노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sup>2)</sup>

성,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노인은 생애과정에서 교육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결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빈곤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최선화, 1999), 이에 따르면 여성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아 가구주 성별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나타날 것이다.<sup>3)4)</sup>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령구조의 변화가 전체 인구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성명재·박기백, 2009), 노인 집단 내에서도 고령노인 비율의 증가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고령노인은 저령노인에 비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고 중장년기에 축적해둔 자원을 소진할 확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령대별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나타나

2) 서구의 경우 노인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생애과정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라 불평등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현상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Crystal and Shea, 1990; Crystal and Waehrer, 1996; O'Rand, 1996). 한편 Xiao 외(1999)는 미국 노인의 소득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의 총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일본(Yamada, 2001), 홍콩(Chou and Chow, 2005) 등 아시아 국가의 노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면의 제약 상 본 장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의 요인을 분석할 때 개인의 특성과 가구주의 특성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을 노인이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을 균등화한 소득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가구주의 특성이 소득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이는 생계부양자의 특성이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전통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4) 집단 변수가 한 시점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의 소득 격차 때문에 나타난다. 한편 집단 변수가 두 시점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비율의 변화, 집단 간 소득 격차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변수의 서로 다른 영향 중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실증적으로는 각각의 영향이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 시간에 따른 노인 집단 내 고령화가 전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수준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노인의 경우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이 현재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애 초반에 획득된 교육수준이 중장년기의 노동경력을 매개로 하여 저축, 부동산, 연금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Crystal et al., 1992). 그런데 더 늦게 태어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코호트가 시간에 따라 노인 인구로 유입되면서 전체 노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수준의 변화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의 노동시장 특성 역시 노인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로연령 인구에 비해서는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지만, 한국의 2010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통계청, 2011) 노동시장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중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후 경제적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영세자영업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일자리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보고는(방하남·신인철, 2011) 노동시장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노인 노동시장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5세 이상 취업자의 업종 및 직업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1980년 74%에서 2000년 52%로 감소하고 있고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1980년 7%에서 2000년 2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 2003: 80-81). 또한 1999~2005년 동안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분석한 김경아와 강성호(2008)에 따르면 가구주가 취업하지 않은 집단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 전체 소득불평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한 노인의 일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비율과 집단 내 불평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종사상지위, 직종 변수를 통해 노인 노동시장 특성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녀와의 동거, 독거 여부 등 노인의 가구구성 특성에 주목한다. 서구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가족의 노인 부양책임이 큰 전통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부양책임이 감소하는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비율은 1994년 37.6%에서 2010년 48.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1994년 62.1%에서 2010년 51.6%로 크게 감소하였다(강성호, 2011: 119). 이처럼 성인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중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구인회(2004: 74)에 따르면 1996~2000년 동안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급증한 것이 빈곤 중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 가구주화 경향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까지 맞물려 노인의 가구구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10년 6.0%로 크게 증가하였는데(통계청, 2011), 독거노인의 상당수가 이혼, 사별을 경험한 취약한 여성노인임을 감안하면 독거노인 규모의 증가 역시 노인 소득불평등

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가구주 가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구성의 변화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sup>5)</sup>

한편 노인 부양행태의 영향은 가구구성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사적이전이 노인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김희삼, 2008), 공적이전보다 사적이전의 노인빈곤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욱, 2011). 하지만 1996~2000년 동안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이 감소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노인에서 사적이전의 감소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손병돈, 2005), 1996~2006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사적이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김경아, 2008: 102)는 사적이전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적연금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요인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최근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률이 2005년 16.1%에서 2010년 30.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통계청, 2011)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민연금이 제도 설계 상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박경숙, 2001; 최현수, 2002; 이용재, 2008; 배준호, 2011), 그 이유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미가입, 보험료 납부 예외 및 체납, 짧은 기여기간 등으로 인해 노년기에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장년기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노년기로까지 연장, 심화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경숙, 2001).

이러한 주장은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소득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는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최현수(2002)는 2001년의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01~2024년의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추정한 결과 사각지대의 존재가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상쇄시키고 노년기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와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경아(2008: 102)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공적연금을 포함하기 전에 비해 공적연금을 포함한 소득의 불평등이 1996년과 2006년에 모두 낮았고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는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논의에 불일치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보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소득의 영향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만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집단의 규

5)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만을 분석할 경우, 당연히 전체 노인 집단 중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비율 등 다른 가구구성 특성의 변화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전체 노인 집단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독거노인과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의 비율이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만 분석할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인 집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소수의 수혜집단에 대한 급여수준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사회보험의 확대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 수혜집단의 규모가 확대된다면, 한편으로는 사회보험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할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총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정적 상관관계(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보험소득을 갖는 관계)가 약해지거나 사회보험소득 자체의 불평등도가 낮아지면서 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의 공적연금 성숙 과정에서 사회보험소득의 영향이 변화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12차년도 자료를 분석한다.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이 자료는 2006년 전까지 1인가구를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노인 집단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이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낮아 정책적으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도시가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패널탈락(attrition)으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도시가계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97~2004년의 지니계수 추이를 비교한 신동균(2007: 518)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을 도시가계조사와 유사하게 구성할 경우 지니계수의 수준은 도시가계조사와 비슷하였지만 지니계수의 시계열 패턴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임병인과 전승훈(2005) 역시 한국노동패널과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된 1998~2002년 지니계수 추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노인 소득불평등의 연도별 추이도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노인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집단이나 여성, 노인, 임금근로자 등 하위집단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영미·한준, 2007; 신동균, 2007; 김경아·강성호, 2008; 김혜연·홍백의, 2009a, 2009b; 손병돈, 2009; 김진옥·정의철, 2010), 한국노동패널이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적인 가계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소득분배 분석 자료로서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개인이며<sup>6)</sup>, 노인의 소득은 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으로 정의하였다.<sup>7)</sup> 노인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6) 본 연구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기준을 따라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7) 각 연도별로 작년 전체의 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분가가구, 소득항목별 결측이 존재하는 사례, 총소득이 0원인 사례를 제외하였고,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위 1% 사례를 제외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2차 자료의 경우 표본이 추가되었지만 이전 차수 자료와의 일관성을 위해 추가표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각 연도의 횡단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지만(김경아, 2008; 손병돈, 2009; 임병인·강성호, 2011; Xiao et al., 1999; Yamada, 2001; Chou and Chow, 2005), 이러한 방법은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제외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Crystal and Shea, 1990: 438).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가구주 가구만을 분석할 경우 가구구성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가구 내 자원의 공유를 가정한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이 노인의 경제적 효용을 잘 대표한다는 점,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거 자녀의 근로소득 역시 노인의 소득원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노인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지 여부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전체 노인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단, 전체 노인 집단의 중요한 하위집단인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집단별 분해의 경우 가구구성 특성의 영향은 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성, 연령 등 가구주 특성의 영향은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석내용과 분석대상이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게 하였다.

소득불평등지수로는 집단별 분해와 소득원천별 분해가 용이하여 실증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계열의 불평등지수 GE(a)를 사용하였다. GE(a)는 a값이 클수록 소득분포 상위의 소득 차이에 대해 민감한 성질을 갖고 있다. a값에 따라 GE(0)은 대수편차평균(mean logarithmic deviation), GE(1)은 타일지수(Theil Index), GE(2)는 변이계수제곱의 절반(half the square o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I_0$ ,  $I_1$ ,  $I_2$ 로 나타내었다.  $n$  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인구집단에서  $i$ 번째 개인의 소득이  $y_i$ , 평균이  $\mu$ , 분산이  $\sigma^2$ 이라 할 때,  $I_0$ ,  $I_1$ ,  $I_2$ 는 다음과 같다.

$$\text{식(1): } I_0 = (1/n) \sum_i \log(\mu/y_i)$$

$$\text{식(2): } I_1 = (1/n) \sum_i (y_i/\mu) \log(y_i/\mu)$$

$$\text{식(3): } I_2 = (1/n) \sum_i [(y_i/\mu)^2 - 1]/2 = \sigma^2/2\mu^2$$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Jenkins(1995)를 따라 집단별 분해(Mookherjee and Shorrocks, 1982)와 소득원천별 분해(Shorrocks, 1982, 1983)를 실시하였다. 전체 인구가  $K$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뉘고, 집단  $k$ 의 인구수가  $n_k$ , 집단  $k$ 의 비율이  $v_k = n_k/n$ , 집단  $k$ 의 불평등이  $I_{0k}$ , 집단  $k$ 의 평균소득이  $\mu_k$ , 집단  $k$ 의 상대소득이  $\lambda_k = \mu_k/\mu$ , 집단  $k$ 의 소득몫이  $\theta_k = v_k \lambda_k$ 라 할 때, 각 연도별로 GE(0)은 식(4)와 같이 집단 내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으로 분해된다. 첫 번째 항은 각 하위집단의 불평등을 집단 비율로 가중화하여 합한 집단 내 불평등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각 하위집단 간 평균소득의 차이로 인한 집단 간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때 집단 간 불평등이 클수록 집단 변수가 총 불평등을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시점 간의 불평등 차이는 식(5)와 같이 분해된다. A항은 집단 내 불평등의 변화가 총 불평등 변화에 미친 영향을, D항은 집단 평균소득의 상대적인 변화가 총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다. B, C항은 집단 비율의 변화가 총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데, B항은 집단 비율의 변화가 집단 내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항은 집단 비율의 변화가 집단 간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때 집단 변수가 총 불평등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A항이 불평등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B, C, D항의 값이 크게 나타날 것이며, 집단 변수가 어떤 방식으로 총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B, C, D항 각각의 값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집단별 분해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직종, 가구형태, 독거노인 여부, 가구주 노인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sup>8)</sup>

$$\text{식(4): } I_0 = \sum_k v_k I_{0k} + \sum_k v_k \log(1/\lambda_k)$$

$$\text{식(5): } \Delta I_0 \approx \underbrace{\sum_k \bar{v}_k \Delta I_{0k}}_{(A\text{항})} + \underbrace{\sum_k \bar{I}_{0k} \Delta v_k}_{(B\text{항})} + \underbrace{\sum_k [\bar{\lambda}_k - \overline{\log(\lambda_k)}] \Delta v_k}_{(C\text{항})} + \underbrace{\sum_k (\bar{\theta}_k - \bar{v}_k) \Delta \log(\mu_k)}_{(D\text{항})}$$

소득원천별 분해에는 GE(2)가 활용되었다. 각 개인의 소득이  $F$ 개의 소득원천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원천  $f$ 의 평균이  $k_f$ , 소득원천  $f$ 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chi_f = k_f/\mu$ , 소득원천  $f$ 의 불평등이  $I_{2f}$ , 소득원천  $f$ 와 총소득의 상관계수가  $\rho_f$ 라 할 때, 소득원천  $f$ 의 총 불평등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는 식(6)과 같이 표현된다. 이때 각 소득원천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는 해당 소득원천과 총소득의 상관계수가 클수록, 해당 소득원천의 비중이 클수록, 해당 소득원천 자체의 불평등이 클수록 커진다.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를 총 불평등으로 나누면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s_f$ )가 계산된다.

두 시점 간의 불평등 차이는 식(7)과 같이 각 소득원천별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 차이의 합으로 분해된다. 이 식을 통해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소득원천별 분해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공적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정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sup>9)</sup>), 사적이전소득(부모님, 자녀, 친척·친지 보조금, 기타 이전소득), 기타소득(보험금, 퇴직금, 증여 및 상속 등)으로 구분하였다.

$$\text{식(6): } S_f = \rho_f \chi_f \sqrt{I_2 I_{2f}}$$

$$\text{식(7): } \Delta I_2 = \sum_f \Delta S_f = \sum_f \Delta(\rho_f \chi_f \sqrt{I_2 I_{2f}})$$

8)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소득은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소득의 측정시점에 맞추어 집단 변수의 측정시점을 조정해야 한다. 성, 교육수준은 시불변 변수로 보아  $t$ 차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연령은 출생년도 정보를 활용하여  $t-1$ 차의 만 연령으로 계산하였다. 종사상지위, 직종 변수는  $t-1$ 차 개인용 설문자료의 정보를 활용하였는데,  $t-1$ 차 개인용 설문자료에 조사되지 않은 경우는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가구형태, 독거노인 여부, 가구주 노인 여부 변수의 경우에는  $t$ 차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득 자료가  $t$ 차의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조사되기 때문이다.

9)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준공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공적 보조금으로 분류하였다(이원진, 2012: 192).



##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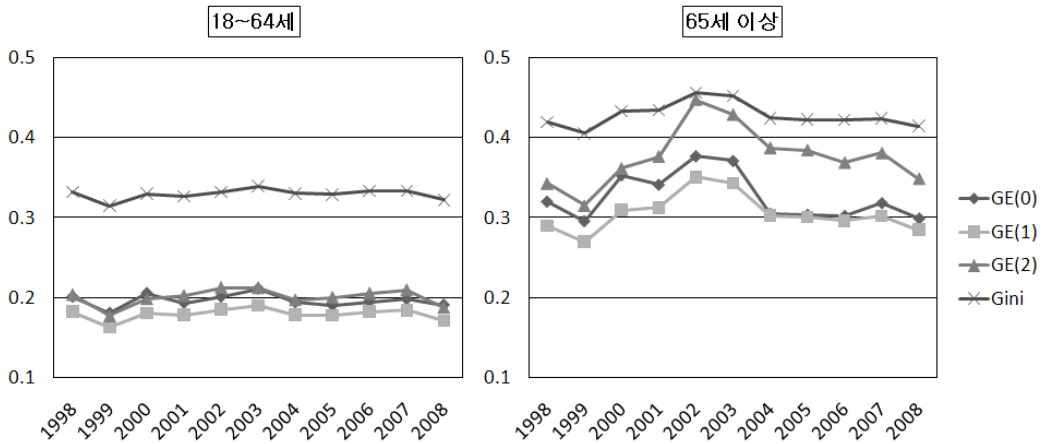
### 1)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

먼저 노인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보자. <표 1>과 <그림 1>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19에서 1999년 0.405로 감소하였다가 2002년 0.456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08년에 0.414로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GE(a)들의 추이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 추이는 18~64세 근로연령 집단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노인 집단은 근로연령 집단에 비해 소득불평등 수준이 훨씬 높다. 1998~2008년 동안 18~64세 집단의 지니계수는 0.315~0.340, 65세 이상 집단의 지니계수는 0.405~0.456으로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이 훨씬 심각한데, 이는 노인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 집단은 근로연령 집단에 비해 소득불평등의 변동 폭이 훨씬 크다. 소득불평등이 1999년에서 2002~2003년까지 증가하고 2008년까지 다시 감소하는 증감의 패턴은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정도는 노인 집단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집단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영향에 취약한 한편, 정책적 개입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할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1>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추이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8~64세	평균(연/만원)	1258	1327	1412	1658	1746	1803	1861	1993	2100	2149	2082
	GE(0)	201	181	205	193	201	211	194	190	195	198	191
	GE(1)	182	163	181	178	185	190	178	178	183	184	171
	GE(2)	204	177	199	202	213	212	197	200	206	210	188
	지니계수	332	315	330	327	332	340	330	329	333	333	322
65세 이상	평균(연/만원)	865	923	949	1033	1081	1090	1173	1249	1263	1255	1274
	GE(0)	320	295	353	341	377	371	305	303	302	318	299
	GE(1)	290	270	309	312	351	343	303	301	296	302	285
	GE(2)	343	315	361	376	447	429	387	384	369	381	349
	지니계수	419	405	433	434	456	452	424	422	422	424	414

주: 각 소득불평등 지표에 10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소득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05년의 값으로 환산하였다.



〈그림 1〉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추이

## 2) 집단별 분해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1999년, 2002년, 2008년의 세 시점을 선택하여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1999년, 2002년, 2008년의 세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1999~2002년에는 노인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2002~2008년에는 노인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세 시점이 소득불평등 추이를 가장 잘 요약하기 때문이다.<sup>10)</sup>

〈표 2〉에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표 3〉에서는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 추이를 집단별로 분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sup>11)</sup>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구형태, 독거노인 여부, 가구주 노인 여부 등 가구구성과 관련된 변수를 분석하였고,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직종 변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sup>12)</sup> 〈표 2〉와 〈표 3〉의 시점별 분해 결과를 보면, 가구주 종사상지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모

10) 2005년을 추가하여 3년 등간격의 네 시점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해보았으나, 시점이 늘어나 분석 결과를 압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에 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크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시점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11) 분해 결과를 해석할 때 언급하는 각 집단의 비율, 불평등, 상대소득, 로그평균소득의 정보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12) 성,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직종 변수의 영향을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분해는 노인의 특성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보다는 가구주의 특성이 소득불평등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므로 가구주 특성별 분해를 실시한다. 그런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주 특성별 분해를 실시할 경우, 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 중에는 노인과 비노인이 혼재하기 때문에, 노인가구주 특성의 영향, 비노인가구주 특성의 영향, 그리고 가구주가 노인인 집단과 비노인인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구구성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개인의 특성을 활용한 분해도 실시해보았지만, 집단 간 불평등이 크지 않아 개인의 특성이 소득불평등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든 연도에서 어느 정도의 집단 간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 소득불평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점간 변화의 분해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2〉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 집단별 분해, GE(0)

	시점별 분해				시점간 변화의 분해					
	연도	총 불평등	집단 내 불평등	집단 간 불평등	연도	총불평등 변화	A항	B항	C항	D항
가구형태	1999	295	243	52	99-02	82	58	4	0	20
	2002	377	305	72	02-08	-78	-50	-3	7	-32
	2008	299	252	47						
독거노인 여부	1999	295	262	33	99-02	82	77	1	-2	6
	2002	377	340	37	02-08	-78	-67	-4	8	-15
	2008	299	269	30						
가구주 노인 여부	1999	295	264	31	99-02	82	55	10	-5	21
	2002	377	329	48	02-08	-78	-55	8	-6	-24
	2008	299	281	17						

주: 10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각 변수들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가구형태: '성인 없는 1인 노인가구', '성인 없는 2인 이상 노인가구', '성인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성인은 18~64세를 의미하고, 모든 범주는 18세미만 아동을 포함할 수 있다.
- 독거노인 여부: '비독거노인', '독거노인'. 독거노인은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한다.
- 가구주 노인 여부: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가구'.

가구형태 변수는 가구 내 노인의 수와 18~64세 성인과의 동거 여부를 조합하여 '성인 없는 1인 노인가구', '성인 없는 2인 이상 노인가구'<sup>13)</sup>, '성인과 동거하는 노인가구'로 분류하였다. 가구형태별 집단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99~2008년에 1인 노인가구의 비율은 14%에서 17%로 증가하였고 2인 이상 노인가구의 비율은 21%에서 31%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성인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66%에서 5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성인과의 동거 비율이 감소하는 노인 부양행태의 변화는<sup>14)</sup> 1999~2002년과 2002~2008년 모두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1999~2002년에는 주로 불평등 수준이 높은 2인 이상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였고(B항), 2002~2008년에는 주로 소득수준이 크게 낮은 1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집단 간 불평등이 증가하였다(C항). 한편 D항을 보면, 1999~2002년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성인 동거가구의 평균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2002~2008년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1인 노인 가구와 2인 이상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가구 중에서도 1인 노인가구는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1인 노인가구는 소수의 조손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독거노인가구이며, 이들의 80% 이상은 여성노인이

13) 2인 이상 노인가구는 대부분 노인부부 가구이다.

14) 성인 가구원의 일부는 노인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일 수 있지만, 18~64세 가구원 중 배우자보다 자녀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성인 자녀의 노인 부양행태가 변화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sup>15)</sup> 독거노인의 상대소득은 0.43~0.53 수준으로 노인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2년 13%에서 2008년 16%로 증가하는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C항). 한편 D항을 보면, 1999~2002년에는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지만 2002~2008년에 독거노인의 평균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간의 격차가 축소되었음이 확인된다.

성인과의 동거 여부 외에도 노인 부양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가구주가 노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 때문에 노인과 동거하는 성인 가구원의 일부는 오히려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가구주가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sup>16)</sup>을 고려하면, 가구주 노인 여부 변수가 부양행태를 더 정확하게 포착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가구주 노인 여부는 가구구성과 관련된 변수 중 1999~2002년의 불평등 증가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1999년 64%에서 2002년 72%로 크게 증가하면서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였고(B항),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D항). 2002~2008년의 불평등 감소기에도 B항은 여전히 양의 값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주 가구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집단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지만, D항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C항은 1999~2002년, 2002~2008년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크게 높은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가 집단 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항과 C항을 합한 값이 양수라는 사실은 노인가구주 가구 비율의 증가가 총 불평등을 증가시켰음을 의미하지만, 2002~2008년에는 C항의 효과가 B항의 효과를 거의 상쇄하였다.

이처럼 가구주 노인 여부별 집단 비율의 변화와 집단 간 소득 격차 변화는 1999~2002년의 소득불평등 증가와 2002~2008년의 소득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 내 불평등의 변화를 나타내는 A항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은 각 집단 내의 불평등 변화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불평등 수준이 높은 노인가구주 가구의 불평등 변화가 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표 3>에서는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별 분해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표 2>와 <표 3>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2>의 가구주 노인 여부별 분해 결과 1999~2002년과 2002~2008년에 A항이 각각 0.055, -0.0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과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 집단 각각의 불평등이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더 크고 A항의 변화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표 3>은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의 불평등이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따라서 <표 3>의 분석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표 2>의 가구주 노인 여부별 분해 결과 중 A항의 일부를 설명함으로써 전체 노인 집단의 불평등 변화에도 영

15) 1인 노인가구에 속한 노인 중 여성의 비율은 1999년 87%, 2002년 86%, 2008년 82%이다.

1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조사된다.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 집단별 분해, GE(0)

	시점별 분해				시점간 변화의 분해					
	연도	총 불평등	집단 내 불평등	집단 간 불평등	연도	총불평등 변화	A항	B항	C항	D항
가구주 성	1999	309	293	16	99-02	50	43	1	-2	7
	2002	359	338	21	02-08	-63	-56	-2	3	-7
	2008	296	279	17						
가구주 연령	1999	309	296	13	99-02	50	49	-1	0	2
	2002	359	344	15	02-08	-63	-57	-1	3	-7
	2008	296	286	10						
가구주 교육수준	1999	309	252	58	99-02	50	39	7	2	2
	2002	359	298	62	02-08	-63	-53	4	-3	-11
	2008	296	249	47						
가구주 종사상지위	1999	309	301	8	99-02	53	57	4	-1	-8
	2002	362	362	0	02-08	-67	-75	3	0	5
	2008	295	290	5						
가구주 직종	1999	309	293	16	99-02	53	53	4	1	-6
	2002	362	351	11	02-08	-67	-73	3	0	2
	2008	295	282	13						
가구형태	1999	309	267	42	99-02	50	40	4	-6	12
	2002	359	311	48	02-08	-63	-52	-3	4	-12
	2008	296	257	39						
독거노인 여부	1999	309	279	31	99-02	50	46	5	-5	4
	2002	359	329	30	02-08	-63	-58	-3	4	-6
	2008	296	268	28						

주: 10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일부 변수의 경우에는 결측 때문에 총 불평등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 변수들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연령: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 교육수준: '초졸미만', '초졸', '중졸', '고졸 이상'.
-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
- 직종: '전문직', '서비스/판매', '농어업', '단순노무', '비취업'. '전문직'은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다. 군인과 분류불가 사례는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 가구형태, 독거노인 여부: 〈표 2〉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먼저 가구주 성의 경우, 집단 비율의 변화는 총 불평등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항, C항), 각 집단별 평균소득의 상대적인 변화가 1999~2002년에는 집단 간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2002~2008년에는 집단 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D항).

가구주 연령별 집단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65~69세인 비율이 1999년 43%에서 2008년 35%로 감소하고 80세 이상인 비율이 1999년 8%에서 2008년 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주 집단 내에서도 고령화 경향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비율의 변화가 총 불평등 변화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B항, C항), 2002~2008년에 소득수준이 낮은 75~79세, 80세 이

상의 평균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되었다(D항).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가구주가 초졸 미만인 비율이 1999년 39%에서 2008년 23%로 감소하고 고졸 이상인 비율이 1999년 21%에서 2008년 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주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졸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B항). 고졸 이상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 집단이 더 늦게 태어난 코호트임을 감안하면 중장년기에 더 다양한 노동경력을 경험하고 이질적인 은퇴과정을 경험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가구주 종사상지위와 직종의 영향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 가구주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99년 18%에서 2008년 10%로 감소하는데, 이러한 감소의 일부는 비취업 비율의 증가(약 5%p)로, 또 다른 일부는 단순노무 비율의 증가(약 2%p)로 이어졌다. 이는 노인가구주 중 농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이차노동시장의 취약노동자로 노동시장에 머무르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노인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1999년 24%에서 2008년 18%로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4%에서 6%로 증가하는 종사상지위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노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데, 특히 불평등 수준이 높은 비취업 노인가구주 비율의 증가가 집단 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항). 비취업 노인가구주 집단의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은퇴 후 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한 고소득 집단과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근로소득의 감소를 보전할 만한 소득원을 찾지 못한 저소득 집단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른 변수와는 달리 종사상지위와 직종의 경우에는 1999~2002년 소득불평등 증가기에 집단 간 격차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D항), 이는 주로 소득수준이 높은 상용직과 전문직의 평균소득이 이 시기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뚜렷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경우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직종과 종사상지위별 평균소득의 변동이 크고 시간에 따라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집단 간 격차의 추이에 대한 해석은 유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구형태와 독거노인 여부 변수의 경우, 집단 비율의 추이가 불안정하고 B항과 C항을 합한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 집단 비율의 변화는 소득불평등 변화에 일관된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형태와 독거노인의 비율 변화로 인한 영향은 집단 비율의 추이가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낸 전체 노인 집단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주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구성 특성의 영향은 특정 가구유형이 이미 제외된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보다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예측에 부합한다. 다만, <표 3>에서도 1999~2002년 불평등 증가기에는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고 2002~2008년 불평등 감소기에는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D항).

이상의 집단별 분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구구성 요인은 전체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생계를 책임

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별 집단 비율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2002년 불평등 증가기에는 가구유형별 집단 간 소득 격차 확대도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둘째, 2002~2008년 불평등 감소기에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가구유형별 집단 비율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유형별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된 것은 2002년 이후에는 자녀로부터의 직접적인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자산소득, 공적연금, 공적보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후소득을 구성해나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졸 이상 집단과 비취업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집단 비율 변화보다는 집단 간 격차의 확대와 축소가 총 불평등 추이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소득원천별 분해

지금까지 집단별 분해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을 일부 밝혔지만, 모든 분석에서 집단 내 불평등의 변화(A항)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집단별 분해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표 4>에서는 전체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표 5>에서는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GE(2)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 소득원천별 분해, GE(2)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	공적보조금	사적이전	기타소득
소득원천 $f$ 의 비중 ( $100 \times \chi_f$ )	1999	100	70	11	5	2	11	2
	2002	100	64	13	10	3	10	1
	2008	100	54	13	14	6	12	1
소득원천 $f$ 가 0보다 큰 비율 (%)	1999	100	68	22	8	53	35	3
	2002	100	63	25	22	79	39	3
	2008	100	57	30	44	73	58	4
소득원천 $f$ 와 총소득의 상관계수 ( $\rho_f$ )	1999	1.000	0.797	0.302	0.275	-0.111	-0.118	0.265
	2002	1.000	0.747	0.466	0.266	0.044	-0.151	0.278
	2008	1.000	0.677	0.531	0.283	-0.063	-0.056	0.125
소득원천 $f$ 의 불평등 ( $1000 \times I_{2f}$ )	1999	316	603	5167	10741	6291	2324	42513
	2002	447	830	6954	5567	14257	1903	95353
	2008	349	920	6704	3017	2088	1363	29882
상대적 기여도 ( $100 \times s_f$ )	1999	100	77	13	8	-1	-3	6
	2002	100	65	23	9	1	-3	5
	2008	100	59	30	12	-1	-1	1
절대적 기여도 ( $1000 \times S_f$ )	1999	316	242	43	27	-3	-11	18
	2002	447	291	103	42	3	-13	21
	2008	349	206	106	40	-3	-5	4
절대적 기여도 변화 ( $1000 \times \Delta S_f$ )	99-02	132	49	61	16	6	-3	3
	02-08	-98	-85	3	-2	-6	8	-16

〈표 5〉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 소득원천별 분해, GE(2)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	공적보조금	사적이전	기타소득
소득원천 $f$ 의 비중 ( $100 \times \chi_f$ )	1999	100	50	17	9	3	19	2
	2002	100	47	16	16	4	16	0
	2008	100	42	16	18	7	17	1
소득원천 $f$ 가 0보다 큰 비율 (%)	1999	100	52	26	9	55	50	3
	2002	100	50	28	27	82	48	2
	2008	100	49	33	46	72	66	3
소득원천 $f$ 와 총소득의 상관계수 ( $\rho_f$ )	1999	1.000	0.683	0.433	0.388	-0.066	-0.001	0.241
	2002	1.000	0.619	0.546	0.397	0.114	-0.069	0.065
	2008	1.000	0.576	0.607	0.369	-0.025	0.019	0.127
소득원천 $f$ 의 불평등 ( $1000 \times I_{2f}$ )	1999	412	1094	4457	8465	5144	1449	65286
	2002	491	1293	6572	4346	12101	1400	47154
	2008	386	1253	5771	2676	2060	1082	37103
상대적 기여도 ( $100 \times s_f$ )	1999	100	56	24	15	-1	-0	5
	2002	100	47	33	19	2	-2	0
	2008	100	43	39	17	-0	1	1
절대적 기여도 ( $1000 \times S_f$ )	1999	412	231	98	64	-3	-0	22
	2002	491	232	162	93	12	-9	1
	2008	386	166	149	66	-2	2	4
절대적 기여도 변화 ( $1000 \times \Delta S_f$ )	99-02	79	1	64	30	15	-9	-21
	02-08	-106	-66	-13	-27	-13	11	3

먼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원천인 근로소득의 영향을 살펴보자. 전체 노인 집단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1999년 70%에서 2008년 54%로 감소한 것은 노후 소득구성의 장기적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노인이 스스로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동거하는 성인 가구원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비중의 감소가 전자와 후자 중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비중이 1999년 50%에서 2008년 42%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상당부분이 노인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7)</sup> 하지만 전체 노인 집단의 근로소득 비중 감소량(16%p)이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근로소득 비중 감소량(8%p)보다 더 크다는 것은 전체 노인의 총소득 중 성인 가구원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부양행태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8)</sup>

17)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경우에도 성인 가구원과 동거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도 그 일부는 성인 가구원이 벌어들인 소득일 가능성이 크다 (김수환·조유미, 2006: 32). 하지만, 표로 제시하지 않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비중이 1999년 24%에서 2008년 17%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인이 스스로 벌어들인 근로소득의 비중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왜냐하면, 표로 제시하지 않은 추가 분석에 따르면, 비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1999년 90%, 2002년 87%, 2008년 87%로 그다지 감소하지 않아 전체 노인 집단의 근로소



요컨대,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노인 스스로의 근로활동에 대한 의존도와 성인 가구원의 근로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1999~2002년 불평등 증가기에 전체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0.049만큼 크게 증가하여 총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 노인 집단의 근로소득 불평등 기여도 증가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됨을 의미한다. 첫째, 근로연령층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근로연령 집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비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sup>19)</sup> 둘째, 근로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집단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즉, 1999~2002년 근로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 증가는 노인 근로활동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연령 인구의 노동시장 여건과 부양행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1999~2002년에 노인가구주 가구 비율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집단별 분해 결과와 상응한다. 한편 2002~2008년 불평등 감소기에는 근로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감소한 정도가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 총 불평등 감소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된다. 이처럼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감소한 이유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총소득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근로소득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장기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근로소득 외 나머지 소득원천 중에서는 자산소득, 사회보험, 사적이전이 대체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총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원천은 자산소득이다. 특히 자산소득의 경우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증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자산소득이 점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9~2002년 불평등 증가기에는 자산소득과 총소득의 상관계수, 그리고 자산소득 자체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9~2002년 소득원천별 절대적 기여도 증가량을 살펴보면 자산소득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소득원천임이 확인된다. 또한 2002~2008년 불평등 감소기에도 자산소득과 총소득과의 상관계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자산소득을 갖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자산소득을 보유한 집단의 비율이 2008년 3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자산소득 자체의 불평등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에서는 자산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 감소량이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득 비중 감소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19) 표로 제시하지 않은 추가 분석에 따르면, 비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집단에서 근로소득의 GE(2)는 1999년 0.194에서 2002년 0.234로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0.024만큼 증가하였다.

사회보험소득은 분석기간 동안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자산소득과 사적이전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다음으로 규모가 큰 소득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사회보험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최근 공적연금의 성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20)</sup> 이러한 사회보험의 확대가 총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999~2002년에는 비교적 소수의 노인에게 사회보험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소득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보험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소수의 안정된 노동경력을 가진 노인에게 집중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예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02~2008년에는 전체 노인 중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44%로 크게 증가하고<sup>21)</sup> 사회보험소득 자체의 불평등이 감소하면서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감소하거나 적어도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2002~2008년에 0.027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008년에도 사회보험소득과 총소득의 상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보듯이 사회보험소득이 고소득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사회보험의 영향권에 포괄되면서 사회보험소득의 영향이 조금씩 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험소득의 영향이 변화하는 양상은 특히 자산소득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자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은 모두 총소득과의 상관계수가 양의 값인 소득원천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자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을 많이 갖는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하지만 상관계수의 값이 자산소득의 경우에 훨씬 크고,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소득원천 자체의 불평등 수준도 자산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 자산소득이 사회보험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자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 모두 1999~2002년에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고 2002~2008년에 불평등 기여도 증가추세가 둔화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산소득이 사회보험소득보다 1999~2002년 불평등 기여도 증가량이 훨씬 크고 2002~2008년 불평등 기여도 감소량이 더 작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소득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요컨대, 자산소득에 비해 사회보험소득이 총 불평등 증가에는 더 적게 기여하고 감소에는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자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것임을 잘 보여준다.

반면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공적보조금의 영향은 사회보험소득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공적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뿐만 아니라 경로우대교통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0)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사회보험소득에는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소득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노인이라는 점, 최근 공적연금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에 나타난 사회보험소득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공적연금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1) 2008년 65세 이상 인구의 실제 공적연금 수급률은 25%임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10) 전체 노인 중 사회보험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44%로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 개인이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더라도 가구원 중 다른 노인이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적연금 비수급자인 여성 노인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공적연금 수급자일 경우 44%에 포함된다.

점심 도시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등 소액의 다양한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 중 공적보조금을 0원 넘게 받는 노인의 비율은 1999년 53%, 2002년 79%, 2008년 73%로 매우 높지만 총 소득에서 공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 2002년 3%, 2008년 6%로 매우 작다. 한편 공적 보조금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급여가 집중되기 때문에 총소득과의 상관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sup>22)</sup>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1999~2002년 불평등 증가기와 2002~2008년 불평등 감소기에 각각 총 불평등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변화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sup>23)</sup>

마지막으로 사적이전의 영향을 살펴보자. 전체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의 비중이 1999년 11%에서 2008년 12%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의 비중이 높은 노인가구 주 가구 노인이 전체 노인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 분석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적이전의 비중이 1999년 19%에서 2008년 17%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후소득구성에서 사적이전의 역할이 천천히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사적이전은 공적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총소득과의 상관계수가 대체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 역시 최근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2008년 불평등 감소기에 사적이전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는 오히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 근로소득의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자산소득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총소득에서 사회보험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999~2002년에는 소수의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확대되면서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지만, 2002~2008년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규모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늘어나면서 점차 불평등 기여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공적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평등 기여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2002~2008년에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사적이전을 통한 노인 소득분배 개선을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2002년의 경우 공적보조금과 총소득의 상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1999~2008년의 모든 연도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전체 노인의 경우 2002년,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의 경우 2000년, 2002년만 상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모든 연도에서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23) 공적보조금의 불평등 기여도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한 데는 2002년의 공적보조금과 총소득의 상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각주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의 상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 것이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적보조금의 불평등 기여도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2002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의 경우에는 공적보조금의 불평등 기여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노인 소득불평등의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기적으로 가족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앞으로도 가족 부양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57.1%에서 2009년 60.6%로 증가하고 있고(통계청, 2010),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2006년 67.3%에서 2010년 38.3%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11). 따라서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가족 부양기능이 약해지는 장기적인 흐름을 전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 향상과 근로활동 변화가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 집단의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는 주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졸 이상 노인가구주와 비취업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의 노동경력과 은퇴과정의 다양화(박경숙, 2003)가 노인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산업화 이전 과거의 노인 집단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면, 최근에는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분업화된 직업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경력과 이질적인 은퇴과정을 경험하는 노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비취업 노인 집단은 생애과정에서 연금, 자산 등의 노후소득원천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 등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노인 집단 내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은 하위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 역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노후소득구성의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02~2008년 노인 소득불평등 감소기에 모든 소득원천 중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서구와 비교할 때 한국의 노후소득구성은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의 비중이 크고 공적이전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수완·조유미, 2006; 김진욱, 2011), 이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체제의 후진성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연령 인구의 소득구성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노후소득구성의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노후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의 역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각각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공적이전, 자산

소득, 사적이전의 역할에 따라 노인 소득불평등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등 중장년기에 축적된 경제적 성과를 노년기로 연장하는 역할을 하는 자산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족의 부양기능을 반영하는 사적이전의 재분배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이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다섯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소득이 확대되고 있는데, 1999~2002년에는 사회보험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지만 2002~2008년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증가추세가 둔화, 혹은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연금의 확대가 오히려 노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수급률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적연금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김경아, 2008: 104; 강성호·임병인, 2009: 81). 향후 만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이 2010년 22.4%에서 2020년 36.5%, 2030년 51.2%, 2040년 60.6% 등으로 증가할 것임을 감안하면(윤석명 외, 2010: 37),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해나가는 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단기적으로는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소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부조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손병돈, 2009: 1458)이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도 사회보험의 확대가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고소득 노인일수록 더 많은 사회보험소득을 갖는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에 한계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연금 크레딧 제도의 확대 등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는다면 노인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선별적 기초노령연금 강화 방안과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편적 기초노령연금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선별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것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더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별적 기초노령연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기반을 침식할 것이라는 비판을 고려하면(주은선, 2011: 7), 단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선택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전체 노후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소득분포 하위에 위치한 빈곤노인의 소득을 개선하는 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제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체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관계를 설정하는 정책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행태적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한 노인 소득불평등의 추이가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 소득불평등의 연도별 추이 자체보다는 불평등의 증가와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동향 조사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의 현재 특성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생애과정 관점에서 노년기 이전의 생애경험이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노인가구주의 현재 종사상지위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중장년기의 노동경력 특성 역시 다양한 형태의 자원으로 전환되어 노년기의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백의, 2005). 또한 가구구성 특성의 경우에도 현재 배우자나 자녀와의 동거 여부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경험한 결혼, 이혼, 사별, 출산 등의 시기와 횟수 등이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의 과거 생애경험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성호, 2011, “부양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13(1): 113-144.
- 강성호·임병인, 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25(2): 55-85.
- 구인회, 2004,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57-78.
- 김경아, 2008,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 79-107.
- 김경아·강성호,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1(3): 21-52.
- 김수완·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가구유형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9: 5-37.
- 김영미·한준, 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분해, 1998~2005”, 『한국사회학』, 41(5): 35-63.
- 김진욱, 2011,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1(1): 111-127.
- 김진욱·정의철, 2010, “도시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1): 33-60.
- 김혜연·홍백의, 2009a, “여성의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1): 87-114.
- \_\_\_\_\_, 2009b,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inequality among gender)의 변화 추이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61(2): 391-415.
- 김희삼, 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1-130.
- 박경숙, 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141-168.
- \_\_\_\_\_,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
- 방하남·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향분석”, 『한국사회학』, 45(1): 73-108.
- 배준호, 2011, “확대되는 노후소득 불평등과 대책”, 『연금포럼』, 42: 21-32.
- 성명채·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손병돈, 2005,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와 감소요인”, 『평택대학교 논문집』, 19: 249-268.
- \_\_\_\_\_, 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1445-1461.
-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학연구』, 55(4): 503-548.
- 윤석명·Risku Ismo·Vidlund Mika·선우덕·윤조덕·방하남·변승준·신화연·최미선·권선영, 201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재, 2008, “국민연금급여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노인복지연구』, 41: 235-254.
- 이원진, 2012, “노년기로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와 소득이동성”, 『한국사회복지학』, 64(2):



185-211.

- 임병인·강성호, 2011, “고령화 과정에 따른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 『제3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자료집』.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자료집』.
- 주은선, 2011,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쟁: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복지동향』, 2011년 12월호: 4-10.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87-211.
- 최현수, 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22(3): 223-243.
- 통계청, 2010, “2010 고령자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_\_\_\_\_, 2011, “2011 고령자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Chou, K. L., and Chow, N. W. S., 2005, “Income inequality among older adults in Hong Kong : An analysis of change from 1981 to 2001”,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4(5): 388-403.
- Crystal, S., and Shea, D., 1990,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30(4): 437-443.
- Crystal, S., Shea, D., and Krishnaswami, S., 1992,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history, and stratification : Determinants of later-life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Gerontology*, 47(5): S213-S221.
- Crystal, S., and Waehrer, K., 1996, “Later-life economic inequality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y*, 51B(6): S307-S318.
- Jenkins, S. P., 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86”, *Economica*, 62: 29-63.
- Mookherjee, D., and Shorrocks, A.,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 886-902.
- OECD, 2010,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http://stats.oecd.org/>.
- O’Rand, A. M.,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 Understanding cumulative disadvantage and cumulative 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36(2): 230-238.
- Shorrocks, A.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1): 193-211.
- Shorrocks, A. F., 1983, “The impact of income components on th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2): 311-326.
- Xiao, J. J., Malroux, Y. L., and Yuh, Y., 1999, “Sources of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2): 49-59.
- Yamada, A., 2001, “The economic situation and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er people in Japan : Measurement by quasi public assistance standard”,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10: 81-106.

## Accounting for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Lee, Won 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recent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Aggregate income inequality trends are explained by examining evidence from inequality index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 and by income source. Data come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income inequality increased from 1999 to 2002, and then decreased until 2008. Second, household composition changes appear to have disequalizing influenc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ho are economically dependent on non-elderly family member or living with adult children has declined. Equalizing influence of private transfers also decreased between 2002 and 2008.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distributive role of family has weakened over time. Thir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and changing occupational structure among the elderly household head contributed to increase in elderly income inequality. Fourth, earning's factor share has declined steadily, and the diminishing role of earnings provides equalizing influence on elderly income inequality from 2002 to 2008. Fifth, the impact of recent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has changed over time. Inequality contribution of social insurance income increased from 1999 to 2002, and then decreased from 2002 to 2008.

Key Words: Elderly,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by subgroup,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

[논문 접수일 : 12. 08. 08, 심사일 : 12. 08. 29, 게재 확정일 : 12. 10. 10]